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및 의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 정 진 우

법의 적용단위

1. 사업장

(1) 기본적인 적용단위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그 업종,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의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 그 의미에서 「사업장」은 이른바 법의 기초적인 적용단위라고 말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장의 적용단위의 접근방법은 근로기준법에서의 그것과 동일하다. 즉, 사업장이란 공장, 광산, 사업소, 지점 등처럼 하나의 장소에서 상호관련된 조직 하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의 일체를 말한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주로 장소적 개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근로의 양태가 현저히 다르고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부문이 있는 경우,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다면 해당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본다. 예를 들면, 공장 내 부속의원, 자동차판매회사의 부속된 자동차정비공장, 학교에 부속된 급식장,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 담당부서 등은 이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소규모의 공장,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으로서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다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2) 사업장의 업종의 파악방법

사업장의 업종의 구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업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경영, 인사 등의 관리사무를 전적으로 하고 있는 본사·지점 등은 그 관리하는 계열의 사업장의 업종과는 무관하게 결정된다. 예를 들면, 제철소는 제조업이지만, 당해 제철소를 관리하는 본사는 기타 업종으로 된다.

2. 작업장

사업장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장소적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로써 「작업장」이라는 문언도 이용되고 있다.

작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법령 요지 게시 등),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등에서 이용되고 있고, 사업장 속에서의 세분화된 법의 적용단위를 표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작업장이란 사업장 내에서 밀접한 관련 하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개의 현장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주로 건물별 등에 의해 판정하여야 한다.



보고의 의무

사업주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10조제2항).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경우 재해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재 내용에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사업주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①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4조제2항)

산업재해 기록·보존의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 재해발생 일시·장소, ③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법 제10조제1항). 다만,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기록을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시행규칙 제4조의2).

법령요지 게시 등의 의무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그리고 근로자대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노사협의체) 의결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내용,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진단결과,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내용에 관하여 그 내용 또는 결과의 통지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2항).

안전표지 부착 등의 의무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용도·사용·장소 등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10조, 별표 1의2 및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표제도

사업주의 명예·신용을 위협함으로써 통해 산재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를 높이기 위해 '02. 12. 30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 산업재해에 관한 공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관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법 제9조의2).

공표대상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8조의4).

- ①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 ②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③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 ④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

1. 의의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는, 건설업체별 재해율을 조사하여 발표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재해율이 낮은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시 가점부여, 지도감독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재해율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액 감액요청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 및 제7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조사는 재해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일반 재해율과는 달리 사망자수에 가중치를 부여한 환산재해율로 산정한다. 1992년 30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재해율 조사·발표를 시작하였고, 매년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2004년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까지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행규칙 제3조의2(협조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시 별표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실적액의 감액(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및 방법은 별표1에 따른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별표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과 방법은 별표1에 따른다)
나.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는 등 별표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가점 부여

2. 환산재해율 산정방법(시행규칙 별표1)

(1) 환산재해율의 개념

$$\text{환산재해율} = \frac{\text{환산재해자수}}{\text{상시근로자수}} \times 100$$

(2) 환산재해자수

환산재해자수는 환산재해율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해당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 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서, 사망자에 대하여는 부상재해자의 5배의 가중치(사망자 1명을 부상자 5명으로 간주)를 부여한 재해자수로 산정한다.

다만, 개인지병 등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망재해자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건설현장의 하수급인이 전문건설업체인 경우에 그 재해자수를 원수급인 재해자수에 포함시킨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망재해 가중치 산정기준 변천과정

- '99년 이전에는 가중치를 사망자 1명당 산재보상금 지급액과 부상자 1명당 산재보상금지급액 대비 비중을 적용하여 매년 달리 적용하였으나
- 2000. 9.28 시행규칙 개정시 '97년, '98년, '99년 재해율 조사 시 적용한 가중치 12배, 10배, 9배를 평균하여 10배로 정함
※ $(12 + 10 + 9) / 3 = 10.33 \Rightarrow 10\text{배}$
- 2012.1.26 시행규칙 개정시 5배로 변경

(3) 상시 근로자수

$$\text{상시근로자수} = \frac{(\text{연간국내공사실적액} \times \text{노무비율})}{(\text{건설업월평균임금} \times 12\text{월})}$$

※ 연간국내공사실적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의 단체(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업자단체(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업체별 실적액을 합산

※ 노무비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 노무비율 적용

※ 건설업 월평균임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 적용